

정론직필의 애환

불편부당한 기사도 '편견' 매도 일썩..취재기자의 宿命(숙명)인가?



글·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기자가 기사를 제대로 쓰기 힘든 세상이다. 좋은 직업에는 모두 '사'가 붙어 있다. 의사, 변호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하지만 기자는 아직 놈 자(者)가 붙어 있다. 그런만큼 기자는 누구에게나 도마에 오르는 '동네북'이라는 자조적인 한탄이 나올 때도 많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이름을 걸어놓고 기사를 쓰려면 안팎으로 휘청거리기 일썩이다. 복지부 영역에는 이해 관계자가 많아 중심을 잡고 기사 쓰기가 힘들다. 누구나 정론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선부른 지식이나 판단력, 정보 부족으로 한쪽 편에 치우쳐서 오도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잦다 보니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하면 '음모설', '배후설'에 농락당하며 때론 갖은 욕설을 듣기도 한다. '상식' 선에서 기사를 쓰다 보면 전문가라는 이익집단들에게 '무식'하다며 질타당하는 경우도 있다. 기사가 나온 배경이 순수하지 않다고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도 많다.



‘약대 6년제 전환’ 만 해도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한약사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내용이다. 한약분쟁을 치른 한의사들은 약사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2년을 더 배워 한약까지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의사들도 약사가 1~2년 ‘임상’ 과목을 배우게 되면 의사의 진료 역할을 넘보지 않겠냐며 불안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러나 약사가 더 공부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더욱이 외국도 6년제로 전환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건축학과는 ‘5년제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5년제로 전환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약사 6년제’에 손을 들어 준다. 이같은 논리로 한약사들이 6년제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주장에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함정이 있다. 의사처럼 약대도 6년제가 되면 약사의 ‘전문성’에 따른 댓가료를 훗날 국민들이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약사 6년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주장 앞에 누가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는가.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다른 부처를 출입하다가 수년만에 복지부로 다시 와보니 현안이 바로 의약분업이었다. 당장 의약분업에 관한 기사를 썼다. 실제로 의약분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

의약분업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다만 큰 병원 앞에 약국이 없는 곳이 많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안한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시리즈 기사를 엮어갔다.



복지부 영역에는 이해 관계자가 많아 중심을 잡고 기사 쓰기가 힘들다. 누구나 정론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선부른 지식이나 판단력, 정보 부족으로 한쪽 편에 치우쳐서 오도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한 복지부 관료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던져왔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은 고치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의약분업에 반대하면 ‘반 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다. 더욱이 내가 속한 회사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미우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은 모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의약분업이 가져올 미래였다. 정부 말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과연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병원과 약국을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논리는 과연 맞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보면 제도란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불편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소수의 학자는 의약분업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돈이 안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정보와 자료를 독점한 채 자료를 내놓지 않는 정부 앞에 기자는 진실에 어디까지 다가설 수 있단 말인가. 제도에 대한 반대와 찬성 의견을 밝히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누가 기사를 위해 그런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겠는가. 특히 요즘에는 특하면 반론청구, 정정보도 요청이고 심하면 소송까지 쉽게 들어가는 세상이 아닌가.

건강보험 재정통합도 마찬가지였다. 건강보험 통합에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 직장인과 지역 자영업자를 합쳐 놓으면 직장인만 ‘봉’이 된다는 논리로 반대론에 섰다. 소득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유리 지갑인 직장인, 임금인상률이 높은 직장인과 재산세 과표 정도만 매년 약간 오르는 자영업자들. 당시 통합하면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썼다가 복지부의 젊은 관료에게 ‘무식한 사람’으로 몰렸다. 분통이 터졌지만 결과가 나오는 1년 뒤에 보자며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관료는 ‘통합’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나중에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1년 뒤에 나타난 결과는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올라갔다. 내가 이겼다고 이제와 그 젊은 관료에게 시비를 걸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사회 연대’라는 대의명분 기치를 내걸고, 재정통합 반대는 ‘직장인들의 자기 이익 지키기’로 몰아가는 추세였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예전에 건강보험 통합을 주

장했던 시설 등을 들이대며 신문의 '논조 일관성'을 요구하기도 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태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나빠졌다. 지역의료보험은 이미 2000년 말에 파탄이 나서 정부의 지원으로 겨우 지탱할 지경에 처했다. 직장의료보험도 2001년에 들어서 갑자기 돈이 쑥쑥 빠져나갔다. 이를 보고 나름대로 보험료 수입과 진료비 지출을 연구해 직장의료보험이 5월에 파탄난다는 기사를 썼다. 며칠 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발언을 해, 이를 다시 기사화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사도 당시 일부 복지부 관료들은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기사 출처 배후를 건보공단으로 지목하며 기사를 몰아세웠다. 학자들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분석해 내놓은 기사를 하루아침에 '배후설'로 뭉개버리는 것이었다.

복지부를 담당하면서 느낀것은 이같은 행태가 보건의료 문제만 걸쳐 있는 것이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지, 국민연금, 식품문제 등 전선은 다양하고 폭 넓다. 한번은 국민연금에서 보육사업을 지원해 준 돈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를 기사화했다. 보육업체들이 적자에 시달려 지원해준 돈의 이자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해와 연금 적립금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제기될 문제였다. 그러나 보육업체들은 "기사 때문에 우리가 모두 길바닥에 나가앉게 됐다"며 거세게 항의해 왔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기사는 절대로 쓰지 말자고 몇 번씩 다짐한다. 비싼 밥먹고 남에게 오해받을 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알게 되면 귀를 쫑긋 세우며 취재에 나선다. 기자의 숙명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도 일순 체념에 빠진다. 



정보와 자료를 독점한 채 자료를 내놓지 않는 정부 앞에 기사는 진실에 어디까지 다가설 수 있단 말인가. 제도에 대한 반대와 친성 의견을 밝히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누가 기사를 위해 그런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겠는가. 특히 요즘에는 특하면 반론청구, 정정보도 요청이고 심하면 소송까지 쉽게 들어가는 세상이 아닌가.

